



■17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93회 임시회

# 제2공항 전제 스마트시티 등 격론 예고

### 오는 18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현안 보고 상하수도본부 업무 보고서 수도물 유충 쟁점될 듯

올해 두 번째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도물 유충 재발 사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또 도의회의 사무처 직원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제392회 임시회 때 진행하지 못했던 일부 집행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재개한다.

이번 임시회에도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계획식 이틀날인 18일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수립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을 점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용역진은 자산관리 신탁공사 설립, 쇼핑아울렛 조성, 트랩과 같은 도심순환형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3차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트랩 도입은 지난 2010년에도 추진됐다 경제성 부족과 공론화 미흡으로 무산된 적이 있고, 쇼핑아울렛과 자산관리신탁공사는 각각 지역 상권 반대와 실현 가능성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논란

을 사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쟁점이다.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3차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예정된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지난 2월말 터진 수도물 유충 재발 사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충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정밀여과장치가 올해 1월 말 이미 고장났음에도 제주도가 한달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매서운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림타워 측이 신청한 카지노 이

전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도 관심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측의 '엘티(LT)카지노업 영업장 이전 신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제주 도시사 최종 이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 의견 청취는 영업장 이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지만 시민단체가 엘티카지노산업 영향 평가 수행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사업자 측을 고발한 상태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 공무원 정원을 늘린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오늘 제주 방문 공항 반대대책위 간담회... 원지사는 공개토론 제안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5일 제주를 찾아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을 만난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마을회관에서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를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원 지사는 심 전 대표의 제주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 전 대표가 제주제2공항 반대를 위해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심 전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제주 방문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일

부의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2공항은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국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원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제주도민과 먼저 소통하라"면서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찬성단체 대표만 만나고, 반대대책위원회 면담을 거부한 도지사가 진정 제주도지사인지 제2공항 찬성단체 대표인지 도민들은 의아스러워한다"고 반박했다.

이상민기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 소상공인 내달 30일까지 휴·폐업자 이달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내달 30일까지, 휴·폐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지원대상은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정부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업종이다. 또 정부버팀목자금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수령자들에게엔 일괄 5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버팀목자금 수령자는 150만원, 버팀목자금 미수급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강다혜기자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해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부미연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이경용·강연호·김황국·강충룡 의원이 1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국민의힘 "좌 의장 '나홀로 정치' 맹비난 박원철·홍명환 겨냥 "지역 갈등 조장 사과하라"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체결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에 대해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며 좌파수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회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 아님에도 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 도의회와의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이경용·강연호·김황국·강충룡 의원은 1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좌파수

의장이 '제주도의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은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말자는 도의회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도의회 전체 의견이 아닌 좌 의장의 '나홀로 의장 정치'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 도의회 안건은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논의 절차를 거치고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도민의 뜻이 반영된 대표성을 가진다"며 "의장 개인의 의

견을 도의회 전체 의사처럼 언급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철·홍명환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 지사가 전문가 자문이라는 미명 아래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도민의 뜻을 왜곡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해당 합의문은 더불어민주당 특정 도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제2공항 주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일 뿐 도의회 전체의 합의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구를 대변하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 공식화해 제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두 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알림**

지방자치분할 30주년·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 기념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 전국 순회 대토론회**

올해는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해 정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법제가 주민의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내실 있고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대토론회를 기획 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시·도 권역별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 정책당국자와 자치분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등의 핵심인사들이 참여해 '4할 자치'로 가기 위한 실용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행사는 코로나 시기를 감안, 초청인사 중심으로 갖게 되며, 각 지역 회원사 지원과 웹 및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대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3월25일 14:00(서울)-6월까지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기타 지역은 시·도청 소재지)  
▶ **행사문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 (02-2100-2249)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무국(033)260-9009

▶ **기조발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의 성과와 의미

▶ **발제**: 박기관 전국지방자치회연합회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한리일보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가입하신 제주교구 사제님께 탈퇴할 것을 호소합니다!!!

- 정의구현사제단은 그간 반국가적이며 반교회적인 활동함으로써 온 국민과 신자들로 부터 비난과 성토를 받아왔습니다.
-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아졌고, 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자70%가 냉담, 25~30%만 미사참례)
- 몇년 전 어느 본당에서는 본당 자선비로 책정된 예산을 정의구현사제단과 정평위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왜 봉헌금을 내야하는가?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찬반이 엇갈리는 국책사업과 정치현안에 사제들이 개입하여 투쟁함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정 민군복합항해군기지, 제2공항 반대, 4·3사건 왜곡 등 지금도 강정에서 교회법에 반하는 길거리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회법(제932조, 제933조)에 반하는 불법적인 강정 길거리미사를 중지하고, 철수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김창렬 주교님과 이한택 주교님께서"정의구현사제단 등의 행동은 마귀 행동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제주교구 사제님께서 정의구현사제단 마귀집단 일원으로 함께 하겠습니까?
- 자의든 타의든 정의구현사제단에 가입하신 사제님들께서는 도민과 신자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탈퇴 성명서를 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21년 사순절에

##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임 (국교사)

연락처 (064)722-3356 / 후원계좌 : 제주은행 03-02-372673 (김창우)

· 지도신부 : 김계춘 도미니교 신부 · 자문위원 : 김원울 안드레아 신학자 · 운영위원 일동

